

## 파업 연대한 4명에 20억 손해 배상하라는 법원

### 2010년 현대차 파업 손해 재상고 ... 금속노조 “책임은 ‘불법파견’ 현대차가 져야”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했다가 20억 원을 물게 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법원 판단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금속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차 2010년 CTS 파업 손해소송 재상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차 사측이 청구한 손해 비용을 파업 연대자 개인에게 책임지게 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 15일 현대차 원청에 불법파견 중단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25일 동안 현대차 울산공장 1공장 CTS(문짝 탈부착) 공정을 멈춰 세웠다. 현대차 사측은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파업으로 271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파업에 연대한 금속노조 조합원 4명을 상대로 20억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 1·2심 법원은 파업 연대자들에게 사측 주장대로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3년 대법원은 파업 당사자도 아닌 개인 4명이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올 2월 13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부산고등법원)가 책임 비율을 다소 낮추긴 했지만, 현대차 사측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줄지 않았다. 이자를 더하면 30억 원이 넘는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차 CTS 파업은 자본의 불법파견에 맞선 정당한 투쟁이었다. 파업 원인과 책임은 현대차 사측에 있다”라며 “안타깝게도 법원은 현대차 불법파견 범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파업에 연대한 사람들에게는 20억 손해 폭탄을 던졌다. 불공정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장 위원장은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도록 금속노조가 더 열심히 목소리 내겠다.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손해가압류 고통을 끝내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용문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은 “현대차 사측이 할 일은 파업 연대자 고소·고발이 아니라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사과”라며 “당장 손해배상 청구를 취소하길 바란다. 현대차지부장으로서 이번 문제 해결에 끝까지 역할을 하겠다”라고 약속

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범죄는 벌금 3천만 원, 파업 연대했다고 20억 손해? 불공정해”**

현대차 사측 손해소를 맞은 당사자들도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엄길정 현대차지부 조합원은 “재상고 비용 모금에 힘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현대차 자본의 노동자 착취에 단결 투쟁으로 맞서 싸우자”라고 호소했다.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와 금속노조 조합원, 시민들이 재상고 인지대 1천4백만 원을 모금했다. 판결액이 20억 원에 달해 재상고 비용도 많다.

박점규 조합원(전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은 “CTS 파업과 연대 동지들이 없었다면 1만 명이 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을까 되묻곤 한다”라며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누군가 월급이 압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본은 손해 폭탄으로 연대를 막으려 하지만, 다른 투쟁이 벌어지면 그때처럼 또 같이 싸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법원에 이 사건을 신속히 다루라고 요구했다. 노조와 ‘손잡고’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법원 앞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반대·올바른 판결 촉구’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노동자가 승강기 점검 중 추락 사망했다. 금속노조는 3월 10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은 중대재해 사과와 함께 추락사고 방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구조적 문제와 안전장치 미비가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승강기 구조상 안전고리를 설치할 수 없었다. 사측은 안전을 고려한 작업 환경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사측에 ▲승강기 설계 및 설치 시 노동자 안전 확보 ▲승강로 내 검사 점검 시 안전벨트 체결 포인트 설치와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필수 구비 ▲무리한 검사 일정 강요하지 않기 ▲유가족 심리 치료 등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는 작업자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